

정몽구 회장 구속영장 청구

비자금 용처·로비 의혹 규명 '가속'

'총수 구속' 현대차 임원진 수사 협력 압박 경영권 승계·로비자금 활용여부등 쟁점

검찰이 27일 현대차 그룹 정몽구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향후 현대차 비자금 용처 수사와 로비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몽구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향후 현대차 비자금 용처 수사와 로비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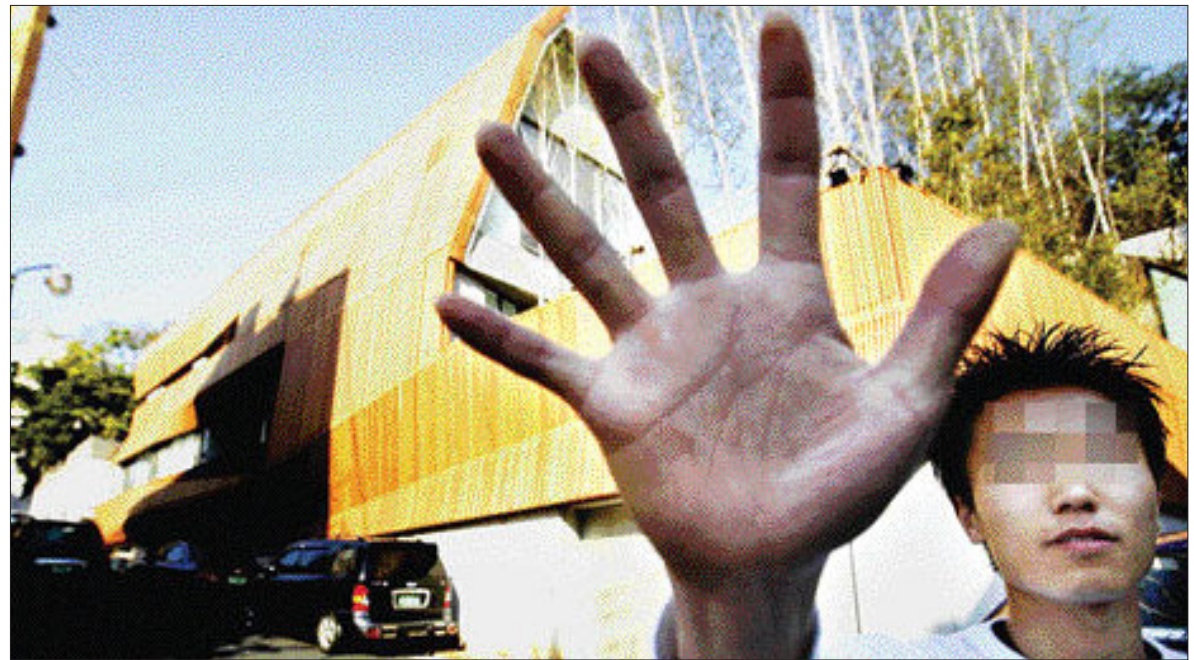
비취볼 때 검찰이 현대차 임원들에게 "총수를 위해 비자금 용처 수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의심 가는 현대차 비자금 용처는 =검찰이 정 회장의 구속영장에 기재한 비자금 횡령액은 1천100억원대로 알려졌다. 이 돈을 로비자금으로 썼든 개인적으로 착복했든 본래 용도로 사용한 이상 모두 횡령으로 간주된다. 현대차는 이 돈으로 정회장의 경영권 승계 자금을 마련하고 김재욱·김동훈씨를 통한 각종 로비에 활용하는 한편 노조 관리와 각종 접대비에도 사용한 것으로 잠정 파악되고 있다.

검찰로서는 현대차 그룹의 편법 경영권 승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규명하고 김재욱씨를 통한 기업인수 로비와 김동훈씨를 통한 부실기업 부채탕감 로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파악해 불법 자금을 받은 사람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나라당 보고 문건에는 '글로벌 비자금'이 지난 대선자금의 일부이며 금고에서 나온 돈은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어 비자금 용처는 검찰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인 셈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형량·배임 등 혐의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27일 서울 한남동 정몽구 회장 자택 앞에서 경비원이 사진 촬영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아버지 위해... 아들 대신... MK, 28년만에 또 구속 위기

검찰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사진)은 구속, 정의선 기아차 사장은 불구속 수사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정 회장은 28년만에 구속되는 처지에 놓였다.

한번은 아들을 위해 구속되는 운명을 맞게 됐다. 그는 32세 때인 1970년 현대차 서울사업소장으로 경영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1978년 그에게 첫 시련이 닥쳤다.

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정 회장은 또 2000년 3월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왕자의 난'으로 현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내홍'(內訌)을 겪었지만 현대차그룹을 얻었다. 2004년 100억원대 비자금을 대신 자금으로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김동진 총괄부회장이 책임을 진 덕분에 사법 처리를 면했다.

그는 특히 이 같은 시련을 딛고 이후 자동차와 철강을 중심으로 한 과감한 투자와 사업 확장 등 공격적인 경영을 펼친 현대차그룹을 출범 당시 세계 5위에서 2위까지 끌어올리고 해외에서는 '2010년 글로벌 톱5'를 목표로 할 정도로 도약시킴으로써 승승장구해 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자치단체장·지방의원 주민소환제 법안 한나라당 불참속 국회 행정자치위 처리

국회 행정자치위는 27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열린우리당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권력 심판론'을 주장하면서 강한 입법외지를 과시해온 이 법안은 지자체 선출직 공무원의 비리가 발생할 경우 주민투표로 해당 공무원을 해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청구사유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전체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찬

성일 경우 소환대상자는 즉시 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법안은 주민소환 도입에 따른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취임 후 1년 이내, 임기말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고, 주민소환을 청구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소환청구를 할 수 없게 했다.

행자위는 또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의 정책공약집을 우편으로 각 세대에 발송하되 그 비용을 중앙선관위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공기업 사장도 경영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우리당 의원 12명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참석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독도, 한국방공식별구역에 포함

美 공군 항법지도 처음 공개

독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안에 포함돼 있음을 보여주는 미국 공군의 항법지도(1987년판)가 처음 일반에 공개됐다.

27일 고지도연구회장이 김신 경희대(국제경영학) 교수가 공개한 이 지도에 따르면 독도 상공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이 아닌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동해권역 안에 들어가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비행물체를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설정된 공역(空域)으로 KADIZ는 1951년 3월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극동방위를 목적으로 최초 설정한 이후 55년 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KADIZ의 범위는 8개의 지리상 좌표를 직선으로 연결한 것으로 동해지역은 북위 37도17분, 동경 133도~북위 39도, 동경133도, 동남지역은 북위 35도13분, 동경 129도48분~북위 36도, 동경 130도30분~북위 37도, 독도(북위 37도14분, 동경 131도52분)를 포함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 지도에 대해 "독도가 한국의 실효적 지



독도 상공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미국 공군 항법지도. 화살표는 독도 상공. /연합뉴스

배를 받을 뿐 아니라 방공식별구역상으로도 한국의 관할권 하에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며 50년 이상 한국·미국·일본 정부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경계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국제법적 근거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한국 경제규모 사상 첫 세계 10위권

원화 절상 영향...GDP 7,931억달러

원화 절상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사상 최초로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재정경제부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WEO(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세계 각국의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GDP 규모는 7천931억달러로 전년도 한계단 올라서 10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GDP 규모가 12조4천857억달러로 부동의 1위를 차지했고, 일본(4조5천713억달러)과 독일(2조7천973억달러)이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지난 2004년 10위였던 인도는 GDP가 7천754억 달러로 12위로 내려갔고 브라질은 7천927억달러로 11위를 차지, 우리나라를 바짝 뒤쫓았다.

우리 경제가 지난해 4.0% 성장에 그쳤음에도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것은 원화 절상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한 것은 원화강세의 영향이 컸다"면서 "아직 통계 자체가 잠정치인데다 브라질과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오는 7월 발간되는 IMF의 IFS(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보고서가 나와봐야 10위권 진입 여부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